

광주 남구청사 내 메가아울렛 소상공인들 폐업 속출 고사 직전인데...

임대료만 챙기는 캠프코...상인 눈물 외면하는 남구청

〈한국자산관리공사〉

남구청 민고 입점했다 적자 허덕 속 점주들 월 수익 7~18% 지급 '빚까지 내서 투자했는데'...임대료 유예 요청마저 수용 안돼 막막

준정부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광주 남구청이 남구청사 내 소상공인 공인을 대상으로 '임대장사'에 혈안이 돼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부분 입주 상인들이 경기침체 등으로 폐업위기를 겪고 있는데도, '상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던 입주 당시 약속은 커녕 상인들의 임대료 유예요청마저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메가아울렛 실태 보니

캠코 투자 받아 청사 리모델링 조례 개정해 임대사업 길 터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22년간 캠코에 임대권 양도
올해 초 50개 점포 입주
35곳 문 닫고 15곳만 운영



설렁한 매장 4일 방문한 광주 남구청사 내 '메가아울렛'이 손님커녕 폐업한 점포까지 속속하면서 사실상 텅 비어 있는 모습이다. 지난 2월 50개 매장이 입점했으나, 이날 현재까지 35개 매장이 폐업했다. /김진수 기자 jeans@

4일 광주시 남구와 캠코, ㈜광주메가몰 등에 따르면 남구청은 지난 2011년 5월 허니베스트먼트로부터 광주시 남구 백운동 옛 화니백화점 10층 건물(현 남구청사)을 105억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청사 리모델링 비용이 없었던 남구청은 지난 2013년 캠코의 투자(300억원)를 받아 청사를 리모델링하고, 2035년까지 22년간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캠코에게 임대권을 양도하는 위탁계약을 맺었다.

남구청은 지난 2014년 10월 '광주시 남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제한 및 조정 조례'에 변경 1km 이내 500㎡(151평) 이상의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수 없다는 조항을 개정해 캠코가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도 열었다.

캠코는 이후 광주메가몰과 협약을 맺고 이 공간에서 '메가아울렛'을 운영하도록 했고, 지난 2월 남구청사 지하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식당과 커피숍, 스포츠, 의료 매장 등 50개 점포가 입주했다. 4층에는 앞서 입주한 가구백화점이 영업 중이다.

현재 캠코측이 받고 있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의 월 임대료는 2억원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캠코와 9년간 임대계약을 맺은 광주메가몰은 입점한 점주들로부터 한달 수익의 7~18%를 받아 캠코측에 월 임대료를 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점포들은 입주초기부터 장사가 안돼 한달 평균 300만원에도 못미치는 매출을 내고 있으며, 점포 수익에 따라 수수료도 받기 어려워 한 해 손해를 보는 점포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메가몰측은 현재 2개월치 임대료를 캠코에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달 댈진적으로 상당수 점포가 폐업까지 하면서 메가몰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실제 이날 현재 35개 점포가 문을 닫고 15개 점포만 운영 중이다. 특히 한때 21개 점포가 입점했던 2층은 커피숍 1곳만 영업 중이다.

폐업을 준비중인 A(여)씨는 "남구청이 아울렛 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놓고 그 어떤 도움도 준 적이 없다"면서 "그래도 남구청을 믿고 빚까지 내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울먹였다.

식당을 제외한 메가아울렛의 점포들은 수수료매장으로 권리금, 보증금 없이 인테리어 비용으로 최소 3000만원에서 4억까지 투자해 운영하고 있다. 매장당 월 평균 임대료는 200만원 수준이다.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메가몰측은 지난 5월부터 캠코에 1년 동안 임대료를 유

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캠코는 지난 7월 1일자 공문을 통해 ㈜광주메가몰측에 임대료 인하 등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조정해 임대료를 책정한 만큼 임대료 유예 요청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남구청 역시 "캠코가 관리하기 때문에 구청이 나서기 어렵다. 아울렛 활성화를 위해 직원들이 식당 등을 이용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등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

㈜광주메가몰 구재성 부점장은 "대부분

점포가 철수하면서 적자가 누적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특히 폐업한 점포의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 위약금 등을 받아야 하지만, 망해서 나가는 분들께 위약금까지 받을 수는 없어 모든 손실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측은 광주일보의 취재가 시작되자 "수익과 리스크는 투자자(임치인)의 책임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시 충분히 인지된 사항"이라면서도 "임대료 유예(납부예정) 사항을 남구청과 협의해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목돈 벌자” 고교생들까지 보이스포싱 가담

중국 범죄조직 송금 2명 검거

중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하수인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챈 고등학생 2명이 붙잡혔다. 이 고교생들은 방학을 맞아 목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로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했다.

광주 북부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돈을 가로채 중국조직에 송금한 혐의(사기)로 서울 모 고등학교 3학년 A(18)군과 B(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23일 오전 11시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서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은 30대 피해자에게 3100만원을 받아 중국조직에 송금하는 등 건당 수십만원의 수

당을 받으며 6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고 돈을 은행에서 찾아 A군 등에게 건넸다.

A군 등은 인터넷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찾는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 친구에게 소개까지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방학을 맞아 대전, 대구, 청주 등 전국을 돌며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출한 돈을 넘겨받아 중국 조직원에게 송금했다.

A군과 B군은 착수금 20만원, 성공수당 30만원, 보너스 20만원 등 목돈을 손쉽게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고 있음에도 범행에 가담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마약 투약 등 3명 입건

광주 남부경찰은 "다인 명의로 향정성 의약품을 처방받고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김모(41), 이모(27)씨 등 2명과 김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윤모(40)씨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직장 후배인 윤씨에게 부탁해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윤씨 명의로 광주 남구 모 가정의원에서 4차례에 걸쳐 일명 '폴피텐' 스티로이드(수면유도제) 120정을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또한 같은 병원에서 윤씨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지난 5월과 지난달 24일 등 2차례에 걸쳐 스티로이드 60정을 처방 받아 투약한 혐의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응급실 폭행’ 무관용 원칙 구속 수사한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는 일이 잇따르자 경찰이 이를 공무집행방해와 맞먹는 행위로 보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4일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관계부처·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최근 발생한 의료진 폭행사건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보건의료단체 대표들은 응급실 내 폭력 사범에 대한 신속·엄정 수사, 예방활동 강화, 유사 사례가 발생할 때 현장 경찰관과 의료진의 원활한 대응을 위한 매뉴얼 작성 등을 경찰에 요청했다.

경찰은 응급실 내 폭력사범을 공무집행 방해 사범에 준하는 수준으로 간주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흉기를

소지하거나 큰 피해가 발생한 사건은 피의자 구속수사 원칙으로 처리한다.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상황이 종료됐는지와 무관하게 신속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현장 도착 후에도 불법행위가 계속되면 즉시 제압해 체포한다. 필요하면 전자총격기 등 경찰 장구도 사용한다.

병원과 협의를 거쳐 경찰차량 순찰 경로에 응급실을 추가해 탄력순찰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은 또 의료계와 복지부에 수사 협조, 응급실 내 비상 등 보안시설 설치, 경비인력 배치 등 자체 보안 강화책 시행을 요청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불복할 기회 없는 DNA 채취 위험”

현재 헌법불합치 결정

디엔에이(DNA) 채취를 위한 영장 발부 과정에서 당사자가 법원에 의견 진술을 하거나 불복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현행 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31일까지 국회가 관련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적 근거가 사라져 2020년부터는 DNA 채취가 전면 금지된다.

현재는 민주노점선전국연합 간부 최모씨 등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디엔에이법) 5조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는 다만 단순위헌 결정으로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될 경우 적법한 DNA 채취를 허용할 법률적 근거가 사라져 심각한 법적 공백상태가 우려된다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재는 "디엔에이 이용법에는 영장 청구 시 판사가 채취대상자 의견을 직접 청취하거나 서면으로 대상자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가 명문화돼 있지 않다"며 "이에 따라 디엔에이를 채취당한 당사자는 사망할 때까지 자신의 디엔에이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돼 범죄수사에 이용되는 것을 승인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인다"고 판단했다.

현재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을 2019년 12월31일까지만 효력을 잠정적으로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는 이날 전까지 법개정을 완료해야 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여경 성추행 경찰간부 징계

○전북경찰이 지구대장 근무시절 부하 여자경찰들을 성추행한 경찰간부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

○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초 군산의 한 지구대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하 여자경찰 2명을 성추행한 군산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것.

○피해자 신고로 감찰에 나선 경찰은 우선 A경감을 전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성범죄 경위를 조사 중이며, 조만간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나주 혁신도시, 무안 기업도시보다
부동산 투자 가치가 훨씬 높은 곳!!

개발 공사가 진행중인 광주인접 국가산단에
투자하거나 공동중개 하실분 상담환영!!

(주)가은중개법인
062-225-0312

